

## IT시대 한국의 국가발전 목표와 문화전략\*

安澤源\*\*

I. 머리글	IV. IT시대 한국의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
II. 21세기 정보기술시대의 신경향	V. 한국의 문화정향
III.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	VI. 무엇을 할 것인가?-문화전략을 위한 제언

## I. 머리글

21세기 정보통신(IT: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사회가 가져온 변화의 주요 단면 가운데 하나는 문화가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단순 가치개념만이 아닌 지식과 정보이자 상품, 자본으로서 시장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창의력의 원천인 삶 그 자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가 눈부신 기술문명시대로 접어들면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창조성’이 중시되고 있다

기실 문명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창조성임은 새삼 강조될 필요가 없다. 토인비가 말한 바대로 모든 문명은 구성원들의 창조성에 의해 흥성했고, 그것이 쇠잔하면서 문명 역시 쇠퇴했다.<sup>1)</sup>

\* 이 논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년 연구과제이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학

1) A.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노명식 역, 『역사의 연구』(삼성출판사, 1985).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는 산업화의 신화에 매달려 삶의 기본가치를 도외시한 데 있다. 그러나 과도한 특수화와 능률의 집착은 언제나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법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그런 과오에 대한 경고로, 파충류가 멸망한 원인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둔해진 때문인 반면, 포유류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방비에 의해서 크다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다는 것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2)</sup>

사회적 연대와 신뢰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그것은 정직과 공정성의 토양에서만 자란다. 사회발전이란 피륙은 제도와 문화라는 두 가닥의 실로 짜지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발전목표를 문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살피려고 한다.

## II. 21세기 정보기술시대의 신경향

21세기는 정신자본, 형이상학적 자본에 입각한 과학·기술·정보·지식의 사회이다. 이는 19세기 이래 지금까지의 ‘공장굴뚝’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드러커(P. Drucker)는 이를 “지식에 대한 지식의 혁명” 시대로 일컬었다. 정보·지식 및 상품, 인적 자원의 이동, 국가간 상호의존과 경쟁의 증대는 권력의 속성을 변화시켜 국경, 국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하드웨어적인 권위적, 폭력적 ‘권력’은 ‘담화적’이며 ‘기술전략적’인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대체되고 있다.<sup>3)</sup>

새로운 형태의 권력원천이 정보와 기술에 근거하면서 국력의 척도 역시 군사력 중심의 기존의 ‘고순위 정치’(high politics)에서 경제, 기술, 지식, 문화, 정보가 우선되는 ‘저순위 정치’(low politics)로 바뀌게 되었다. IT사회에서는 문화와 지식의 생산, 가공, 분배양식이 국부의 주요 원천이 될 것이다. 두뇌계급이 이른바 ‘골드계급’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의 대대적인 재편과 ‘구조조정’이 일상화될 것이다.

2) 위의 책, 제4편

3) 테리안, 「공간의 국제정치학: 시뮬레이션, 감시, 속도」, 홍성민 엮고 옮김, 『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학: 새로운 국제정치학 이론을 찾아서』(서울: 인간사랑, 1991), 292 쪽

정보와 기술의 대중화는 권력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시켜 권력의 수평화, 분권화, 민주화와 함께 책임성, 정당성, 효율성의 요구를 증대시킨다. 민주주의, 시장적 질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로스(R. Rose)와 신(D. C. Shin)은 이와 관련, 제3세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법의 지배’, ‘시민사회’, ‘책임성’의 문제를 강조한다.<sup>4)</sup> 정보기술의 대중화, 세계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은 정치 내지 공공영역의 축소를 가져오고, 민주성 및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과 경쟁을 사회의 핵심가치로 제기한다. 정보기술의 보편화가 전문가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을 촉진하는 한편, 전자민주주의의 확대는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의 민주화의 외연을 심화, 확대시킨다.<sup>5)</sup>

데리안은 21세기 권력의 기술정보성과 관련해 권력 자체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한다.<sup>6)</sup> 첫째, 권력은 중심에 집중되기보다 도처에 분산되었다. 권력은 이제 단일적, 폐쇄적 모습 대신 다양하고 개방적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변화했다. 기존의 공간개념은 위계적이고 분리적이며 닫혀 있었다. 그것은 주변을 배제시키며 편견과 독선,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존 시간은 단일적이며 일원적이었다. 그러나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초공간(hyper space)과 초시간(hyper time)의 등장은 시공간을 새로이 창출하고 확장하며 재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공간의 관념 아래 현대사회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 폐쇄적, 분리적이지 아닌 개방적, 중첩적, 상호의존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공간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이나 주권개념은 약화되고 공간의 동시성, 공존성 병렬성이 증대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주체의 교환성뿐만 아니라 상품, 자원, 정보의 동시적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시공간을 축소하는 동시에 무한대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아탈리(J. Attali)가 사용하는 “유목 물품”, “현대판 유목만”, “현대 유목문화” 등의 말은 모두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sup>7)</sup>

시공간의 개념변화와 함께 현대사회의 지평에 떠오르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

4) R. Rose and D. C. Shin, “Democratization Backwards: The Problem of Third-Wave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2001), pp. 331 ~354.

5) 안병영,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계간사상』, 2000년 봄호, 29쪽.

6) 데리안, 앞의 논문, 302 ~303쪽.

7) 야크 아탈리, 『21세기의 승자』(유재천 역)(서울: 다섯수레, 1993) 참조.

는 “속도의 혁명”이다.<sup>8)</sup> 이제까지 우리는 제동장치의 시대에서 살아왔다. 그것은 금지하고 억제, 간섭한다. 그러나 속도가 생활화되면서 우리는 제동장치의 시대에서 가속장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21세기 정보기술시대의 등장과 함께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 개념의 변질을 초래하는 새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핵, 생화학 등 인류절멸적 대량파괴무기, 환경파괴, 오염,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문제를 방치한 채 어느 한 국가도 자신의 안위와 복지만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국가가 지구상의 모든 문제에 의해 전전공공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안보’는 ‘국제안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그 정의의 폭 역시 좁은 군사적 개념 대신 종래의 도전과 새로운 도전의 온갖 양상을 포괄하는 더 넓은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sup>9)</sup> 1991년 1월의 중동전쟁과 2001년 9월의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태는 미래전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웅변적 예증이다. 기존의 인력전쟁(manpower war)이 단추전쟁(button war)으로, 전면전쟁이 틈새전쟁(niche war)으로, 전투의 전쟁(war of spectacle)이 바라보는 전쟁(spectacle of war)으로, 지상전쟁이 지하전쟁과 우주전쟁으로, 근육전쟁이 두뇌전쟁과 로봇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전장전쟁(battle war)에서 총력전쟁으로, 군사전쟁에서 경제전쟁, 문화전쟁으로의 변화 역시 그것이다.

국제정세의 이런 변화로 인해 그동안 국제정치상의 주체가 되어왔던 국민국가는 그 제어력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에 의구심을 더하게 한다. 어떤 문제의 경우 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엔 너무 심각하고, 다른 경우엔 너무 작다. 이는 비단 안보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미래의 변화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국가의 구조와 관련해 상하향으로 권위의 재배치(relocation of authority)를 할 필요성을 높인다.<sup>11)</sup>

8) Paul Virilio, *Pure War* (New York: Semiotext, 1983), pp. 44 ~45.

9) J. J. Mathews,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68, no. 2(Spring 1989), pp. 174 ~77.

10) 엘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21세기 출발점에서의 생존전략』(이규행 감역)(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aul Virilio, *op. cit.*, p. 115.

11) J. N. Rosenau, “The Relocation of Authority in Shrinking World,” unpublished paper(1990).

헌팅턴의 문화와 문명의 강조 역시 21세기 새로운 표상의 변화이다.<sup>12)</sup> 21세기는 과연 중심문화의 보편주의가 새 패권주의와 결탁하여 여타 중심문화와 갈등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문화와 문명이 국제정치의 지각을 뚫고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된 점이다.

### III.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

IT시대의 격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역할 재편과 정부기능의 효율화가 목전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 자본개념이 이동성이 큰 지식, 인적 요소로 전환되어 시장에서의 경쟁방식이 변화된 가운데 국경을 넘는 새로운 행위자도 등장하고 있다. 가상국가(virtual state),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s) 등이 그것이다.<sup>13)</sup>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욕구 및 시장경제 요구가 통신혁명과 맞물리면서 전자정부(electric government), 기업가적 정부(enterprise government), 사이버 행정(cyber administration) 등 직접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계의 실현이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효율성이란 상반된 가치가 이를 통해 조화된다 해도 시장경쟁을 보완할 복지문제 역시 국가의 지난한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21세기 국가역할과 관련하여, 재니케(M. Janicke)는 현대 산업국가의 두 주요 기능을 국가와 시장으로 지적하고, 사회전체를 위한 공공재 생산자로서의 국가의 문제점이 사적 재화의 생산자인 시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생산하면서도 품질마저 조악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재니케는 이에 덧붙여 구조적 비효율에서 오는 기능상의 문제점과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고비용 국가(expensive state)의 원인이라 말한다. 공공재 생산의 고비용성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서 오며, 그 질적 저하는 국가행위의 사후적 성격, 즉 문제원인에 대처하기보다는 이미 징후가 나타난 뒤 대처하는 예방조치의 실패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뒷북치기는 문제들

12)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서울: 김영사, 1999), 179~181쪽.

13) R.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Politics-Surveys and Debates for Students of Politics*, vol. 17, no. 3(1997), pp. 45~61.

이 눈사태처럼 불거져 미봉에 급급한 나머지 질보다는 양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4)</sup>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필연적으로 관료제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1) 지나친 칸막이, 전문성 등에 따른 사안의 다양성, 복잡성 무시, 2) 원인대처보다 결과 중시, 예방보다 사후처리 관행, 3) 비일상적, 사안 신축적인 간여보다 관행적, 일상적, 표준적 수단과 절차선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처방안은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고, 근본적 혁신방안은 모든 것이 망가져 국제시장에서 생존이 위협받는 마지막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못해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구조의 비대화, 관료화는 또한 정치를 불모화해 현안에 대한 반응전략이 정치의 책임성에 의하기보다는 관료체계의 기득권에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관료조직은 전문성, 조직력 등에 의해 당, 의회 등의 정치부문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추종세력화되어 정치는 더 이상 합리적 여론수렴, 정책형성,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민의와 유리된다. 정치가 적절한 전문성, 민의수렴, 정책능력을 결여한 경우 정치의 독선, 오도된 리더십에 의해 정치와 관료체계의 유리현상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기업과 이익단체들에 의한 국가 불모화 현상이 촉진되어 정치의 결정력은 더욱 보잘 것이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해 다국적·초국적 기업, 외부적 영향 등에 의해 국가주권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가 전능이란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정치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채 사회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데서 정치의 책임성만 모호해질 뿐이다.<sup>15)</sup>

지대추구적 단기이익에 집착하는 시장이 상황변화에 대응치 못하고 정치 역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정치외곽의 제3주체의 중요성이 커지며 목소리를 높여간다. 비판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세력이다.

이런 문제에 덧붙여, 일찍이 민주화를 이룩한 제1세대, 제2세대 민주화 국가군들과는 달리 한국 등 뒤늦게 민주화의 과정에 들어선 제3세대 민주화 국가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sup>16)</sup> 민주화는 서로 다른 두 과정의 결과물인데, 하나는

14) M. Janicke, *State Failure: The Impotence of Politics in Industrial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0), 3 장

15) *ibid.*, 2 장

16)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기별로 영국, 미국 등 제1세대 민주정,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등 제2세대 민주정, 한국 등 제3세대 민주정 국가군으로 나뉜다. R. Rose and D. C. Shin, *op. cit.*,

‘국가의 근대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통치과정에 대한 인민적 ‘참여의 민주화’이다. 제1세대, 제2세대 국가들은 먼저 ‘법의 지배’, ‘시민사회의 구축’, ‘책임성’이라는 국가 근대화작업을 한 뒤, 대중참여라는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제3세대 민주화 국가들은 그 순서를 달리하여 먼저 자유선거를 이룩한 뒤, 뒤늦게 근대국가의 구축에 들어갔다.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붓물 속에 법치, 책임성이 실종된 채 시민사회의 발달 역시 맹아수준에 머무르는 기형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한결같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가치와 태도정향을 결여함으로써 부패가 만연하고, 신뢰부족의 결과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공조적 대신 가족, 동향인 중심의 비공식조직에 기대는 이른바 ‘모래시계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17)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 21세기 IT시대의 국가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고 강한 최소국가의 실현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국제경쟁의 심화에서 오는 효율성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과 개인적 자유의 상충현상이다.

둘째, 민주적 조정국가의 실현이다. 빌케(H. Wilke)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에 직면하여 국가는 직접적 개입을 포기하고, 분권화, 다중심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각 체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를 통한 간접 개입을 맥락적 조종(contextual steering)이라 불렀는데, 이는 국가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통치방식 대신 하위체계의 자기책임을 중시하는 이른바 ‘성찰적 자기규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18)

셋째,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창의적 교육의 창도자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의성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력의 밑거름이다. 토인비는 고금의 역사를 섭렵한 뒤, 통찰적으로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한 문명사회 안의 창의성의 존재여부를 들고 있다. 창의적인 소수, 이들 소수에 대한 대중의 모방이 바로 한 문명사회를 발흥시키는 원동력이다. 때문에 대중적 미메시스의 원천인 지도층의 창의성이 고갈된 사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으

---

pp. 331 ~ 354.

17) *ibid.*

18) H. Wilke, *Ironie des Staates* (Frankfurt, 1994).

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야 한다.<sup>19)</sup>

넷째, 문화, 복지 공동체의 구현이다. 미래사회가 지식, 기술, 정보, 문화에 기초한 이른바 ‘연성권력’ 사회라면 경제와 상품의 내용 역시 단순한 생산요소의 결합이기 보다는 지식, 정보의 창의적 결합이다. 그 토양이 문화라면 상품은 바로 문화인 것이다. 문화는 경제를 결정하는 새로운 중요한 생산요소로 변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와 관련한 다음의 미래예측에서 나타난다.

새로운 21세기는 디지털의 사회다. 그러나 그것은 테크너러지의 시대가 아니라 센소러로지의 시대야 나아가 웨어러지의 시대다...그 바탕 위에서 느낌 감각. 감성이 융합하는 시대다. 시각우위의 시대가 아니라 오감균형의 시대다... 결국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대변한다.<sup>20)</sup>

지구촌시대, 정보화시대, 퓨전시대는 21세기의 서로 다른 문화의 접목, 상치, 융합을 불러 올 것인데, 이런 다양성과 상치를 어떻게 조화하고 수용하느냐의 예지에 따라 한 사회의 창의성과 국력이 결정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거나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국가주도적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온 국가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국가’ 모델에 지나치게 기울 경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실직자, 노병약자를 삶의 막다른 길로 내몰아 사회를 흡스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작고 강한 정부는 밖으로 경쟁에 대비하고, 안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효율과 복지, 경쟁과 인간다운 삶이 조화되는 국민배려적 최소국가가 되어야 한다.<sup>21)</sup>

---

19) A. J. Toynbee, 앞의 책 4장

20) 정진홍, 「디지털문화의 전개: 센소러지와 감성융합」, 『계간사상』, 2001년 봄호

21) 안병영, 앞의 논문, 25쪽



## IV. IT시대 한국의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

### 1. 한국의 국가발전 목표

변화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 2000년을 향한 우리의 국가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숙한 민주국가의 완성이다. 둘째, 지속적 번영을 통한 선진경제대국에의 도약이다. 셋째,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넷째, 개인의 창의가 살아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문화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 1) 성숙한 민주국가

한국은 고도산업성장의 신화에 매몰되어 국가근대화를 소홀히 한 결과 민주화의 구호는 요란했으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친 채 정작 그 내용과 실체의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재의 극심한 정치혼란, 권력의 사인화, 집중화, 대중소외, 부정, 비리 등은 모두 그 결과이다.

당연히 극복하기 위한 많은 개혁과제가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적 제도와 규칙들에 대한 합의가 불확실한 가운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다. 변화와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노사농촌문제, 세대간 차이, 통일정책, 환경·여성문제 등의 갈등은 지금의 정치체계로는 해결해 나가기가 힘든 실정이다. 정치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력을 소진시키는 소모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가히 약탈적 성격마저 띠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뒷전에 밀려 소홀히 되어온 ‘법의 지배 원칙’과 사회적 공정성, 책임성의 확립, 건전한 시민사회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원리와 제도가 사회, 경제의 모든 부문에 구석구석 적용되어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가 심화되어야 한다. 정치제도가 국민 일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대중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금권, 연줄정치가 타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식이 개혁되어 법과 권리, 의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sup>22)</sup>

22) 신정현 외, 『21세기 한국의 선택 국가체제와 정책과제』(서울 우석 1998), 98 ~100 쪽

## 2) 선진 경제대국

선진의 문턱에서 멈춘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경제는 사회·정치적 안정, 대외적 위상 제고, 통일역량 축적을 위한 초석이다. 경제지상주의도 문제지만 경제 없이는 정치·사회·문화발전도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국가간섭과 규제 배제, 구조조정, 지식인력 육성, 연구개발과 정보망 확충으로 경제기반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계화의 핵심한 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총력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존의 국가주도적 성장전략은 이제 WTO 등 국제규범의 강화, 민간부문의 규모 확대, 경제구조의 복잡성, 정보화 등으로 관료제의 역기능을 늘릴 뿐이다.

국가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집행, 조정에 치중해야 한다. 지식사회 구축을 위해 교육을 선진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21세기 국가간 새로운 전쟁이다

## 3) 통일의 실현

분단은 군사력 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 대치관계로부터 오는 정치·사회·심리적 비용, 국제적 위상저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하여금 우리의 분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우리의 지상과제이다.

## 4) 문화 복지공동체의 구현

지난 압축고속성장의 와중에서 전통가치와 문화는 파괴되고, 지역과 계층간 빈부격차는 벌어져 공동체문화는 실종된 상태이다. 인간다운 삶이 없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는가? 이기주의, 파벌주의, 기회주의, 이종주의, 연고와 파벌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부정, 비리가 번창하고 사회적 신뢰가 상실되어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파괴하고 좌절감을 부추기며 장기적인 사회유지비용을 높인다. 신뢰사회에서 효율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민주주의가 발현된다.<sup>23)</sup> 이런 점에서 문화는 미래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는 것도 우리 국가의 목표이다. 우리 사회의 노약자들은 지난 세대 경제성장의 헌신자들인 동시에 현대 교육과 양육을 위해 희생한 층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복지공여는 더욱 당연한 일일 것이다.

## 2. 21세기 한국의 비전

비전 제시에 앞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촉발된 권위의 집중, 파벌과 지역주의, 관료제 병폐, 부정과 부패 등에서 오는 신뢰상실과 갈등을 극복하여 공동체정신을 되살리는 것으로, 국가경영의 틀과 시민사회의 형식,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저변의 가치체계의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한국의 당면과제는 제도와 의식의 문제로 요약된다.

둘째, 정치면에서 고비용 저효율, 부패비리 구조의 원천을 제거하는 한편, 깨끗하고 능력 있는 지도력의 선택을 통해 국민적 창의성을 발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 제도개혁은 국가권력구조, 정부구조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국가쇄신책과 맞물린 문제이다. 역할분담과 자율의 진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규제 정경유착의 악폐를 철폐하고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율화, 개방화, 공정경쟁의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가치관의 순화와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어느 면에서 제도나 구조보다는 의식과 관행의 잘못 탓인 경우가 크다. 기회주의, 이종주의, 한탕주의적 이기주의, 인간과 생명의 경시풍조, 보신주의, 건전한 사회적 경쟁과 합리성을 막는 집단주의, 파벌주의, 지역 및 연고주의 등이 사회분열의 조장과 함께 국민적 창의성, 사회적 정의를 가로막는 원흉이다. 신뢰와 정직, 더불어 사는 기풍을 위한 의식개혁을 통해 21세기 지구촌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전한 시민사회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 세계 속의 선진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

23) 위의 책, 100~102쪽

한국의 지향점을 정책과제적 시각에서 더 구체화하고 이를 중장기적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발전이 명실공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권 연줄정치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민의가 결집되어야 하고, 권력의 사인화가 방지되어야 한다. 권력은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제되어야 한다. 권력과 권한이 분산되어 새 시대에 걸맞는 자율화, 자치화, 분권화, 개방화, 국제화가 무르익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개인적 창의성이 최고도로 꽃피워야 한다. 국가권력기관과 삼권이 독립과 자율이 이루어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제재도약은 한국이 21세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바탕이 되는 것으로 국부의 지속적 창출 없이 번영과 안정, 통일강국이 실현될 수 없다.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력,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기술사회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정보기술사회의 특징으로서 지식과 기술의 혁신에 바탕을 둔 경제의 소프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과거의 하드웨어적 경제구조에서 정보, 지식, 첨단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규모의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특징은 지구촌규모의 교역확대와 경쟁의 심화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자율적, 창조적, 진취적, 개방적 인간상이며 인간과 인간, 사회 내부,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창출이다. 상거래가 지구촌화함에 따라 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고도의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정보고속도로의 건설, 전자상거래와 물류유통 등을 포함하는 산업의 정보화,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 기술지식집약 산업화의 집중적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앞서의 정치민주화와 함께 국가재도약을 위한 정부운용체계와 지도력의 전반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 경쟁, 정보화의 시대에서 정부의 규제, 간섭의 배제와 함께 저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기능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적 안정과 결속, 화합, 국부창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구조 쇄신과 함께 정부구조

조정과 지도력 쇄신 역시 필요하다.

4) 문화는 21세기 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생산자본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IT 시대에는 민족문화가 국가간 경쟁의 주요 요소이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육성은 이 때문에 중요하다. 문화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상품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적 투자가 중요시된다. 만화, 영상산업, 도자기, 한지, 칠기공예 등 전통을 현대와 접목시키고, 세계 속의 질 높은 문화선진국으로의 발돋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정서 생활공간의 확대와 생활문화의 재편노력이 뒤따를 것이다. 퇴폐향락문화로부터 쾌적한 생활, 여가를 생산과 차원 높은 정신생활로 연결시키는 투자와 구조재편, 문화인프라 확대 역시 중요하다.

5) 문화선진화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배금주의, 이기주의, 한탕주의, 기회주의, 이종주의, 부정부패, 노동천시 경향, 낭비와 과시욕 등을 근면과 검소, 정직, 자율 등이 지배하는 신뢰사회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개인과 기업의 창조성,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이 극대화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선진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6) 교육의 인간화가 문화재편과 의식전환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제기된다. 이른바 열린 교육, 자율교육, 평생교육의 실현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닫힌 교육, 주입식, 타율교육, 기능과 지식습득 위주 교육이 가져온 천문학적인 망국적 사교육비 증가 등을 바로잡아 창의력과 전문성이 살려진 창조적, 생산적, 진취적, 도덕적, 인간적, 인류보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7) 환경은 문화와 함께 미래사회에서 삶의 풍요를 위해 필수적인 동시에 세계무대에서의 상품경쟁과 문화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의 우리 사회는 환경의 생활화를 통해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도록 생활과 기업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 사회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의미하며, 환경문제의 생활화, 의식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뜻한다. 공해발생의 원천이 아닌 환경친화적 산업이 미래 우리 산업의 모습이 될 것이다.

8) 경제가 세계 속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그 창의성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 정부는 작고 강하며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업가적 정부, 전자정부,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계의 실현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원칙에 의해 불필요한 기능의 민간중심으로의 이전, 기업으로서의 정부를 의미하며, 전자정부는 관료의 매개 없이 정보네트웍에 의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민봉사행정의 실현을 의미한다. 직접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계의 확립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우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조사, 공청회 등에 의해 정보독점을 막고 국민일반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가상정부(cyber government) 내지는 사이버행정(cyber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9) 세계 속에서의 국가이익이 복잡화, 다기화, 다원화, 지방화, 자율화가 진척됨에 따라 정부의 관료체계 역시 현재의 위계적 규제 위주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태스크웜스(task force) 중심의 전문 유연체제로 탈바꿈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조정과 통합을 위한 팀웍이 중요하다.

10) 자원부족과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 두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로 비약하기 위한 국제물류센터, 해운항만·항공센터의 건설이 요긴하다. 우방외교와 교역외교가 상호연관되어야 하며 사회가 세계로 열리게 됨에 따라 평화, 민주, 시장가치 등 보편가치와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11) 사회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문화강국으로 탈바꿈되어 기존의 집단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파벌주의, 연고주의 성향이 불식되어야 한다

12) 고비용 저효율의 한 원천인 인프라투자가 확대되어 사람, 정보, 물자의 통신, 이동이 원활해져야 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우리사회의 활력과 창의력이 창달되어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통일되고 안정된 나라로서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수평적 참여 확대에 의해 부강하고 편안한 나라로 변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력 확대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상호의존과 교역, 협력의 증대에 힘입어 이 지역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힘을 갖출 것이다. 동북아는 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시베리아-만주-한반도-유럽-북미를 잇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개발될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혼란 뒤 경제, 사회, 문화 민족적 통합이 이루어져 갈등이 해소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냉전 이후의 새 세대가 남북한에 출현함으로써 의식의 동질화, 일체화가 이루어져 통일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룸하여 한민족공동체의 실현이다.

13) 자동차, 전자, 항공, 관광, 신소재, 정보, 유전공학 등이 신산업으로 한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도약시켜, 2020년 무렵에는 세계 5 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국의 재도약을 위해 가장 큰 장애는 정치의 낙후, 경제적 창의성의 부재이다. 다가오는 정보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의 소수 엘리트 위주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에서 탈피해 권력분산에 의한 작은 정부, 분권화, 자율화, 국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 역시 그 창의성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한국은 다가오는 2020년 무렵에는 세계 속에서 웅비하는 지역적, 국제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떠맡도록 역할과 책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적 비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제도·구조의 개선에 앞서 국민역량을 결집시킬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고 국민적 가치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개혁에 병행하여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문화전략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의 정향을 개괄한다.

## V. 한국의 문화정향

### 1. 문화와 발전

문화는 “한 사회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되는 지속성을 갖는 태도, 가치, 신념체계”로서 정의된다.<sup>24)</sup> 문화가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그것이 발전이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 때문이다.

문화와 발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2차대전 이래 냉전시기 동안 제3세계의 개발 필요성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서 문화적 양태가 경제성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24)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8. 문화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문헌은 안택원, 「국가위기를 통해 본 한국병의 문화적 접근-한국문화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제언」, 『한국정치의 개혁과 반개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9~39쪽 참조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화이론’의 오류로서 취급되어온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내용에서 1) 지나치게 단선적(unilinear)이며, 2) 경제 또는 문화결정론에 치우쳐 있으며, 3) 서구적 가치에 함몰된 인종편향적(ethnocentric)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 국제사회가 급속하게 서로 의존하게 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편적 가치가 되면서 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접근법이 힘을 얻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사람인 잉글하트(R. Inglehart)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아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새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1) 일정한 문화적 정향은 경제기술발전과 연계되고 이를 부추긴다. 2) 문화와 발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sup>25)</sup> 잉글하트는 그 예로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前산업사회의 귀속적, 계층적 신분제도가 비인격적이며 업적 중심의 근대사회로 변화된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새 접근법은 최근 일고 있는 다음의 두 가지 경향에 의해 확대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냉전의 종식과 함께 권위주의, 중앙집중주의, 과도한 합리성에 대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승리에 의해 이들 가치가 제반사회에 대한 보편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근대화의 촉진제로 작용된 가치요소들이 한 단계 높은 발전단계로 진입하는 탈근대화과정에서 새로운 변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잉글하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탈산업화단계의 문화요소 양태로서 개인적 자유, 자기표현, 삶과 노동의 의미추구, 인권과 환경의 중요성 증대 등을 꼽고 있다. 아직은 이들 문화정향을 둘러싼 보편성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치정향이 한 사회의 발전에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한국사회의 발전, 개혁을 가로막는 문화정향을 살피기로 한다.

## 2. 저신뢰와 연고주의

‘신뢰’란 시민적 자율, 책임, 권리, 의무를 기초로 성립하는 시민사회와 그에 바탕

25) Ronald Inglehart, “Korean Culture in Global Perspective: Phenomenology and Human Studies in Korea,”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1995년 7월 10일)에서 발표된 논문.



을 둔 사회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핵심개념으로 후쿠야마와 잉글하트의 문화연구에서 중심적 개념이 되고 있다.<sup>26)</sup> 신뢰란 시민적 자율, 책임, 권리, 의무를 기초로 성립하는 시민사회와 그에 바탕을 둔 사회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핵심개념이다. ‘공동체’란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내면적 윤리관습과 호혜적인 도덕적 의무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공동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입각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바로 ‘신뢰’라는 개념이라면 신뢰가 공동체의 초석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뢰의 정도가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한다는 점은 콜맨(J.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sup>27)</sup> 콜맨은 번영을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 외에도 사람들이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 신뢰는 가족 안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국가에 구현될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집단들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콜맨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후쿠야마에 의해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공동체나 집단에서 일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이 확립한 조건 아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한 사회에서 신뢰가 결여되면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일종의 세금이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다. 사람들은 형식화된 규범이나 규제의 체계 속에서만 협력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교섭의 성사는 종종 강압적인 방법이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러시아처럼 원자화된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조직은 물론 가족기업도 제대로 클 수가 없다. 이런 사회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공통점의 하나는 범죄조직인 ‘비행공동체’의 존재이다. 남부 이탈리아, 미국의 대도시 빈민가, 러시아,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의 도시에서는 실제 마피

26) Francis Fukuyama, *op cit.*;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7) James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988).

아가 강력한 형태의 사회조직으로 남아있다. 원자화된 사회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중국 같은 가족주의 사회의 공통요소는 강력한 중앙집중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프랑스, 남이탈리아가 모두 이런 단계를 거쳤다. 독일과 미국 등의 비친족 공동체사회에서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이 오래 지속된 일이 없다.

신뢰의 차이는 한 국가사회 내에도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예는 아마도 이탈리아 남·북부의 비교분석일 것이다. 뱅필드(E. C. Banfield)는 1950년대 이탈리아 남부지방 몬테그라노의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 이 마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어떤 형태의 사회적 결사체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민들이 느끼는 유일한 도덕적 의무란 자신의 핵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이었다. 가족만이 개인에게 사회보장을 주는 유일한 원천이었다. 가장이 죽기라도 하면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몬테그라노의 도덕규범은 자연히 핵가족의 물질적,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모아졌다. 뱅필드는 이를 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 불렀다.<sup>28)</sup>

퍼트남(R. D. Putnam)은 뱅필드의 연구결과를 이탈리아 전역에 확대시켰다. 그 결과 남부인들은 중북부인들에 비해 사회적 신뢰의 정도와 동료시민들의 준법행위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발견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롬바르디, 트렌티노 등의 북부지역에서는 피아트(FIAT)나 올리베티(Olivetti)로 대변되듯 높은 경제수준을 나타낸다.<sup>29)</sup>

한국은 유교적 가족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저신뢰사회이다.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전세계 53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로 신뢰가 낮은 사회로 여겨진다.<sup>30)</sup> 한국이 가족지향사회이면서도 중국과 달리 거대기업군이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국가개입 때문이다. 가족지향사회에서는 신뢰가 가족을 포함한 혈족내에 머무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 역시 가족단위의 소규모에 국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제압했다. 1961년 이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했으며 그 모델이 일부는 일본의

28)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Glencoe, Ill.: Free Press, 1958).

29)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0)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Software of the Mind*, 『세계의 문화와 조직』(차재호·나은영 역)(학지사, 1996).

대기업과 재벌이었다. 권력과 경제의 긴밀한 관계는 경제개발의 기본방향이 시장보다는 관료체제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본질적인 면에서 가족중심적이면서도 조직면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던질 수 있었던 원인은 단순히 정부권력의 강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친화의 가교를 통해 협소한 가족주의의 경계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학연, 지연, 그리고 문벌로 불리는 혈연관계가 그것이다.<sup>31)</sup> 한국의 문벌집단은 혈통에 입각한 발탁을 통해 광범한 인력 풀을 제공한다. 영호남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역연고주의는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속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중고교 및 대학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학연 역시 자연발생적 결속의 토대이다. 한국은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명문대가 강력하고 광범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명문대 동창회의 연대감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회적 출세를 위한 관계망의 기초가 된다. 한국전쟁 이래 징병제가 보편적인 한국에서 군대동기회 역시 중요한 사회적 연대감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들이 가족내부에 국한되기 쉬운 사회적 자본의 끈을 더 넓은 지역사회나 국가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소속집단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폐쇄성, 배타성, 심지어는 적대감은 오늘날 한국이 국제화된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데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에 대한 동아시아 특유의 강조 역시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한국에 높은 교육열이 없었다면 성공적 지도력은 결코 발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적 성취가 한국민의 자아성취를 위한 기본통로가 되면서 일게 된 지나친 교육에 대한 갈망은 역기능적으로 학연, 사교육비 증대, 창의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 3. 형식주의, 극단주의, 무임승차의 문제

비교문화를 연구한 호프스테드는 유교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

---

31) Francis Fukuyama *op cit.*, 12장 참조

다. 1)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사회안정의 전제로 한다. 2) 가족을 모든 사회조직의 원형으로 삼는다. 사람은 개인이 아닌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체면은 집합주의 가족과 사회내부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3) 덕있는 행동이 강조된다. 4) 교육과 중용, 절약과 끈기가 미덕으로 강조된다.<sup>32)</sup>

끈기, 절약, 교육의 중시는 분명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그러나 불평등관계에 의한 사회안정의 강조는 변화와 모험의 추구를 회피케 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억제한다. 전통에 대한 지나친 존중 역시 혁신에 지장을 초래한다. 체면에 대한 강조는 실체나 내용보다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사회를 이중주의와 기회주의의 늪에 빠지게 한다. 덕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능력과 소신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교성을 중시하게 이끌어 사회를 능력보다는 무사안일, 눈치보기 및 연줄이나 집단, 패거리를 중시하는 사회로 만든다

사회에 이러한 형식주의가 만연할 때 허영과 과소비, 맹목적 모방심리가 판치게 된다. 권력과 유행,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 결과는 사회의 획일화, 과소비, 줄서기이다. 외형이 내용을 결정하는 문화가 자본주의적 배금주의와 결합할 때 천민자본주의가 초래되며 간판, 학력, 배경이 인격을 규정하는 척도가 됨으로써 이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한국이 보이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 학위예의 집착, 망국적 과외열풍, 촌지제공 등이 이 때문이다. 외형보다 실체나 내용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자에 대한 우스꽝스런 체면치레보다 정직과 자아, 내면에 대한 성찰이, 제도나 법보다 책임과 의무가 선행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창출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김병국은 인본주의와 가족주의라는 유교정치의 인식론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구정치의 인식론의 차이가 한국정치의 취약성을 낳게 하는 혼란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sup>33)</sup> 한국 유교를 틀지우는 인본주의와 가족주의의 존재론은 한국인의 일상적 언어와 의식에 뿌리내린 세계관이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타자와의 특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를 상상하도록, 또 그러한 인간관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규정하도록 끊임없이 교육받는 것이 한국인이다. 그 결과 한국인은 서

32) Geert Hofstede, 앞의 책, 7장.

33) 김병국, 「반(反)유교적 유교정치 한국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997년 여름호, 50~73쪽

구의 계약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절대적 개인의 像과는 다른 인간상을 상정하게 된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인간상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개개인이 국가와 교회 등 외부세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 시민이 만들어지는 배움의 터라는 서구적 철학이 한국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 사회계약론 아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참여를 전제하는 서구 민주주의 개념 역시 수동적인 행위자에 머물러온 한국인의 의식에 존재한 일이 없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스런 전통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 새로이 배워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창조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한국정치의 혼란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교의는 두 가지의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프래그마티즘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주의이다. 프래그마티즘과 도덕주의라는 유교적 교의가 갖는 양면성은 정치의 지향점과 관련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의 원천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만’이라는 관점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만 그 관점은 프래그마티즘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도덕주의라는 명분론적 원칙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대립과 긴장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프래그마티즘과 도덕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과 같은 비성숙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독재와 혼란의 극단에서 방황하는 주된 이유는 프래그마티즘과 도덕주의에 대한 편파적 강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현존 질서나 제도를 개혁하고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전략에 대한 준비와 함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실천적 개혁청사진과 지적 확신에 바탕한 확고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러한 의지를 키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도덕적 이상이 프래그마티즘에 의해 쉽게 훼손되고 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주어진 ‘현실’에 의해 손쉽게 압도되기 때문이다.<sup>34)</sup>

결과는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보다 기회를 틈타 일신의 안일과

---

34) 앞의 논문, 69~71쪽

영달을 피하는 무임승차에 대한 유혹이다. 이런 기회주의적 무임승차 유혹은 삶의 세 가지 테제를 이유로 정당화된다. 사회나 역사발전을 확신하고 인간의 변화의지를 과신하고 현상타파에 나섰다가는 전혀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에 봉착한다는 ‘삶의 변태성’ 문제 가 그 하나요, 의식과 국가의 저변토양에 비추어 부와 권력의 불평등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한계성’의 테제가 그 둘이요, 변화가 가져오는 이익은 언제나 타인의 차지거나 그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삶의 취약성’의 테제가 그 셋이다.

‘위만 과 같이 한국인이 느슨하게나마 갈등을 정책과 연결시킬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이고 대결형인 인간해방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수신에 기대 공동체 전체의 실생활을 향상시키려한 유교의 일차원적 의식의 소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과 개혁논의는 조직과 공동체의 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공허한 소리로 그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sup>35)</sup>

#### 4. 권위주의, 집합주의, 강한 불확실성(모험) 회피 경향

한국의 권위주의의 정도는 인켈스와 레빈슨이 사용한 ‘권력거리’란 말로 잘 표현된다.<sup>36)</sup> 권력거리란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제도란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조직이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일컫는다. 조직에서의 권력거리를 나타내는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와 관련해, 권력거리가 큰 나라에서는 상사의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보면 재수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할 뿐 상황을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권력남용이 정도를 지나치면 그때서야 집단행동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간다.

권력거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지위상징은 비웃음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상사가 공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흠이 된다. 일반적으로 나이든 상사보

35) 김병국, 「갈등과 이념-한국정치의 잠재성과 한계」,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31 ~ 135쪽.

36) Alex Inkeles and Daniel J. Robinson, "National Character: the study of modal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system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s. vol. 4(Reading M.A.: Addison-Wesley, 1954).

다 젊은 상사가 더 인기가 있다. 조직은 권력남용에 관한 제소를 처리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권력거리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권력의 차를 다루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권력거리가 큰 나라에서는 권력이 선악을 따지는 기본 잣대로 작용한다. 권력이 합법적이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힘은 정당성 위에 있다. 세상에는 불평등으로 얼룩진 질서가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설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말없는 합의가 존재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권력자에게 특권이 주어지며 실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富를 축적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진다. 권력자의 스캔들은 당연시되지만 은폐되는 것 역시 당연시된다. 일이 잘못되면 위계상 아랫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이런 나라에서는 소득분포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경우가 보통이다. 권력거리가 작은 나라에서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공식적인 지위, 전문성,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복수정당체계가 존재하며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당연시된다. 노조도 독립적이며 실용지향적이다.

권력거리면에서 한국은 53개 국가 가운데 27 번째 등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7)</sup>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함께 유교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권력거리가 큰 문화정향을 갖고 있다. 유교는 삼강오륜의 덕목이 말해주듯 불평등관계가 사회 안정의 초석임을 주장한다.

문화적 차이의 뿌리에는 인간사회의 기본문제가 숨어있는데 개인 대 집단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개인주의란 개인간의 느슨한 사회를 말하며 집합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동안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가리킨다. 호프스테트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는 거의가 높은 개인주의 지수치를 보이는 반면 빈국은 거의 모두 낮은 지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다. 직언은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괴롭더라도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배운다. 갈등에 대한 대처는 일상적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집단주의적 가정에서는

---

37) *ibid.*, p. 52.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운다. 개인적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필수요소는 충성심인데 이는 자원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식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조그마한 일자리를 갖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독립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집합주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수치감이다. 개인주의 사회는 죄책감의 문화로 표현된다. 사회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는데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인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반면, 집합주의 사회는 수치감의 문화이다. 한 집단의 성원이 사회의 규칙을 어기면 같은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적인 의무감에서 오는 수치감을 느낀다. 수치감은 본질상 사회적이며 죄책감은 개인적이다. 수치감의 원인은 위반 자체보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다는 사실에 있다. 죄책감은 비행을 다른 사람이 아는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다.

집합주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개념은 체면이다. 창피를 당했다는 의미의 ‘체면을 잃다’라는 말은 중국에서 연원한 것이다.<sup>38)</sup> 한국인은 중국인이 그러한 것처럼 명예나 위신이라는 뜻으로 누구의 ‘체면을 살려주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많이 따지는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와 맞먹는 특징은 ‘자존심’이다.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불확실성의 회피강도에서 53개 국가 중 가운데 16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sup>39)</sup> 불확실성 회피문화는 애매한 상황을 기피한다. 이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보다는 구조를 추구한다. 그럼으로써 위험부담을 피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회피의 강도가 높은 문화에서는 또한 더 복잡한 인허가서류를 요구하며 사람들이 일종독에 가까울 만큼 바쁜 것에 집착하고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을 지니고 있다. 사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문화일수록 법률과 규칙이 많은 법인데 이는 권력거리의 수준도 한몫을 한다. 우연과 재량의 요소가 위험하고 범죄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38) Favid Yau-Fai Ho,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1976), pp. 867 ~ 884.

39) Geert Hofstede, 앞의 책, 169쪽.



## 5. 심각한 세대차이

한 나라의 전반적 문화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구성원 계층의 문화차이가 어떠한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1은 서구, 동유럽,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세대별 가치관차이를 분석하여 도표로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평균적 출생연대를 표시하며 Y 축은 탈물질적 가치지표(post-materialism index)를 나타낸다.<sup>40)</sup>

〈그림 1〉 한국, 유럽, 동아시아, 아프리카의 연령별 가치성향

한국의 경우, 기울기가 급격하여 세대간 가치간 차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층일수록 한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훨씬 심한 탈물

40) 5개의 탈물질주의 가치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의 항목에 응답했을 경우 높은 탈물질주의 가치지표를 보이는 응답자로 분류되었고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낮은 탈물질주의 가치지표를 보이는 응답자로 분류되었다. Ronald Inglehart, *op. cit.*(1995).

질적 가치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제도가 정부에 대한 저항이나 지지도 철회로 나타나면서 높은 사회적 긴장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세대차문제는 정보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 심화되었는데 세대문제는 이제 계급이나 성적 불평등 못지 않게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sup>41)</sup> 갈등양상도 단순한 세대교체를 요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세대비약’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대비약’이란 말은 1999년 말부터 신문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대비약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리하다

세대비약을 통해 전면교체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진취적 문화창조력이 현실에 투입될 수 있으리라 본다...비약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가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sup>42)</sup>

이런 목소리의 이면에는 기술과 정보가 권력이 되는 정보화사회의 등장이 자리하고 있다. 세대비약론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기성권위와 새로운 권위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면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한국가족 특유의 가족 공리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이를 부채질한 것이다.

세대문제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은 소비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창출방식이며 미디어의 작동원리이다. 소비사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는 각 연령집단을 잠재적 구매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세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X세대, 미시족, N세대, I세대 등이 그것이다.<sup>43)</sup> 앞으로의 사회는 자본이 계급을 통해 이윤을 실현하기보다는 세대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을 찾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세대가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축으로 등장할 것이다.

41) 함인희,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2000년 봄호, 190쪽.

42) 위의 논문, 201~202쪽

43) X세대는 미국의 경우 1961-197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N세대란 말은 ‘Net Generation’의 줄임말로 사이버공간을 삶의 주요 무대로 인식한다. I세대란 1994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인터넷 세대를 나타내며 N세대와 구분하기 위한 말이다. 위의 논문, 203~204쪽.

## VI. 무엇을 할 것인가?—문화전략을 위한 제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복합문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지구화, 정보화시대가 공간의 확대를 가져오고 시간의 기억을 축적하고 넓혀주며 이런 새로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인간이 만나고 어울리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기대하는 말일 것이다. 문화가 수단이라기보다 인간의 본질이라면 복합문화는 필연코 복합적 인간의 창출을 수반할 것이다. 복합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적일 것이고, 탈이념적이면서도 정치적일 것이며, 생명공학 등 테크놀로지 발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위험을 경계하는 환경생태적 면모를 보일 것이며, 침묵해온 주변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지배문화의 주도권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어느 나라도 고립해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국제경쟁이 필수적 생존조건이 될 것이다. 단일문화는 외래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을 피하면서도 정체성 확보에 부심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제국주의’ 논란과 관련한 정체성 논의는<sup>2</sup> 분법적 문제이기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어느 한 사회의 수용능력과 인식수준의 문제이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기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는 타문화와 부딪치고 뒤섞이면서 형성되는 것이다.<sup>44)</sup> 문제는 한 사회와 문화의 주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중심이 서 있다면 그에 대한 대항문화, 또는 반문화는 위협이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된 문화가 초래하는 해독은 조선조의 이념적 학문적 독점이 가져온 결과를 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점에서 문화적 개방성은 정체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화란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며 변형되는 법인데,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식민화한다는 식의 생각은 문화의 성장발전과 관련한 복합적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다.<sup>45)</sup>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1. IT 시대에 국가체제는 효율적 통치구조를 갖추어나가도록 끊임없는 쇄신을 거치도록 해야 함은 물론 그 운용을 위한 새로운 국가운용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가운용문화란 국가운용자들이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가치관, 신념

44) 김성곤, 「21세기 문화와 세계화의 과제」, 『계간사상』, 2001년 봄호 26~40쪽

45) 위의 논문. 40쪽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는 효율성 중시의 정신과 태도를 함양한다. 2) 국가체제는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간주하고 봉사, 지원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를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기본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3)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운용자들은 개방적, 쇄신적, 창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새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체제의 개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방적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4) 국가운용자들은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 행사, 국익관련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지키고, 국가위신을 높이며, 투자와 무역증진, 교민보호, 홍보 등을 위한 국제적 감각, 태도, 소양을 지녀야 한다. 국정운영자들은 상품, 문화의 대외판매자인 동시에 외교관으로서 관련 국제관행, 언어, 상거래, 타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는 개방적, 적극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2.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시대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문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반면, 경제는 문화창달을 위한 자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나친 상업화, 상업문화에 의한 문화의 예속화는 창의성을 고갈시켜 정신의 저속화와 경제의 활력상실을 초래한다. 문화창달은 인간존중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대중적 소비문화와 함께 순수문화의 창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순수문화는 인간생활을 영적으로 고양시켜 기품 있고 고결한 사회로 이끄는 원천이다. 예술가를 육성하고 전통과 고전문화를 존중 발전시켜 문화적, 지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2) 문화적 정체성의 확인만큼 외래문화의 발전적 수용 역시 중요하다. 내적 문화가 타문화에 의해 자극되고 활력을 얻어 문명을 살찌운 전례를 본받아야 한다.

3. 가치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자아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장에서 실현될 문제로 자아를 긍정하고 가치기준을 자아에서 찾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기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앞서 서양의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요, 동양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라 했다. 이는 서양의 윤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검열하는 기관이 바로 자아의 내부에 있음을 강조

하는 것이다. 가치기준을 자아에 두고 선택도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자공은 개인에게 독립심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서양이 동양에 비해 확고히 검소함과 민주주의의 기틀인 개인주의 전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가치의 기준이 자아에 있지 않고 자아 밖에 있을 때 개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가치의 기준이 자아에 있을 때 인간의 용기도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이는 용기가 된다. 개인은 남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만큼 인정하지만 남의 욕망을 모방하지 않기에 가치관이 상대적이 되고 다양해진다. 한국인의 과외열풍은 가치관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회가 학벌과 학연에 의해 움직이는 데서 온다.

유교문화의 병폐의 핵심도 자신의 내부보다 외형과 형식을 강조한 데서 오는 의식의 이중구조로 볼 수 있다. 유교윤리는 근대 시민상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무엇보다 수직체계이며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사회구조이며 이상적 인간상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윤리관이어서 외적인 요구와 내적인 요구가 상충해 의식의 이중구조를 낳는다. 또한 가문과 문벌 등의 가족중심주의가 혈연, 지연, 학연을 낳아 공정한 게임을 막는다. 배타성이 강하고 가치의 기준이 자아에 있지 않기에 획일주의에 빠진다. 가치관의 획일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라 낭비적 경쟁을 부추긴다.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유교문화의 외형주의와 군사정권의 능률지상주의적 산업화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보이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야 하는 일과 성취 속에서 살아왔다. 빠른 시간 안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과중심주의와 목표중심주의가 국민들의 뇌리 깊숙이 박혀 있다.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빨리 빨리’라는 한국인들의 대명사가 생기게 되었다. 부실과 부패가 이런데서 생긴 것이다.

5. 학교교육만이 아닌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욕망의 절제와 독립심의 미덕이 가르쳐져야 한다. 인간의 의식이란 어려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산업화과정에서 일에 매몰되다보니 자녀를 학교에만 내맡긴 채 집안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 그 동안의 일이었다. 유아기부터 아이의 절제된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 가운데 규율과 절도가 있음을 젖을 물리는 것에서부터 식탁예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가르친다. 독립심, 절제의 미덕과 함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윤리를 가르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취한 행동에 책임을 지도

록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를 말뿐이 아닌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토대이다. 공공질서, 규범, 법을 지키는 훈련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식사랑에 겨워 아이를 방종과 무규율 속에 젖게 하는 교육은 아이의 장래를 망칠 뿐 아니라 사회에도 악덕이 된다. 사랑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젊은 어머니 교실’ 등이 운영되어 올바른 가정교육이 계몽되는 것도 한 방편이다.

6. 인간의 사악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인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출시키는 교육과 장치가 필요하다. 유교문화는 인간을 이상주의와 엄한 논리로 규정하고 실제적인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를 간과했다. 윤리규범이 불평등구조에 바탕을 두어 민중의 한이 상존하게 되었다. 원리는 좋지만 획일적이고 추상적 이론에 치우쳐 대의명분에 그치기 십상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배층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폐쇄를 고집하고 변화에 소극적 태도를 지녀 나라를 잃는 수난을 자초한 것이다.

이제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랴’는 가르침보다 황금을 황금으로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도달하기 힘든 ‘의리’나 ‘희생’과 같은 추상적 도덕보다 구체적이고 이해가 쉬운 자립, 자궁, 정직하고 정확한 거래, 줄서기, 청결하기, 법지키기 등을 습성화하게 한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인의 주장과 타협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sup>46)</sup>

7. 지역의 균등발전,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 정부규제와 간섭의 축소, 권위주의 혁파, 연고에서 능력본위사회로의 정착 등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압제와 수난, 빈곤 속에서 가족은 사회적 격변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보호막으로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이런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 사회적 의무감과 공동체정신이 제대로 자리잡기 어려웠다.

신뢰가 가족내부에 머물면서 사회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연히 이를 회피코자 하는 강권이나 규제가 강화되었다. 불신뢰와 권위주의, 집단주의간의 악순환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계층화가 강화되고 집단주의가 신분적 권

---

46) 신정현 외, 앞의 책, 1장, 3장, 4장.

위주의와 결합되면서 의리가 행동의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가문중심의 혈족주의, 영호남 등 지역주의, 학맥을 통한 인적 관계망은 오늘날 한국병의 근간을 이루는 연고주의, 파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유교적 가르침의 추상성과 군자로 대표되는 治者중심사상은 교육에 대한 중시풍조와 함께 노동천시경향을 낳아 기술발전과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집단주의에 따른 개인적 주체성의 상실은 창의성을 말살시켜 사회적 획일성, 폐쇄성, 모험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부채질했다.

갑우선의 사회에서 권력과 힘이 사회적 메타파워로 자리잡으면서 경쟁과 부패비리가 심화되고 선비적 풍류라는 이름 아래 주색문화가 사회적 저변문화로 확대되었다. 노동천시와 체면·의리 중시, 집단주의는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과소비와 낭비, 무절제, 무한경쟁을 조장한다.

집단주의가 맹목적 연고주의와 결합한 결과 무조건적 추종과 감언이설에 의한 줄대기와 금권주의, 그리고 파벌과 보스정치가 만연했다. 오늘날 정경유착, 인사비리, 눈치보기, 이중주의, 과소비, 향락문화의 만연, 연고주의, 관료주의와 부패비리 등의 이른바 한국병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가족주의와 민족적 동질성에 바탕한 지나친 연고주의는 또한 계급과 노사관계 등 갈등의 조직화를 역사적으로 막아왔다. 갈등이 인간사의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것을 순기능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문화적 토양의 존재 역시 중요한 관건이다. 갈등 자체가 억압되어 사회가 침체의 늪 속에 빠져 있거나 갈등이 존재해도 그것이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되어 사회진보를 위한 추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을 멈추거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능력 대신 끼리끼리 뭉치는 파벌주의, 집단주의는 형식보다는 내용, 연고보다는 실력이 강조될 때 사라질 것이며 가족의 유대를 대신할 사회적 보호막이 있을 때 신되는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8. 사회에 만연된 무임승차 의식의 해소이다. 공공재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이 자기희생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생산적 저항운동에 참여치 않고 그 열매만을 추구한다면 사회가 발전할 리 만무하다. 한국사회는 예로부터 가족주의적 연대의식이 만연해 충효가 강조된 나머지 돌출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개성과 용기는 쉽게 패가망신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은 불의, 부정이

있어도 들추어내 저항하기보다 남의 희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고자 연연할 뿐이다.<sup>47)</sup> 한국사회가 개혁을 통한 점진적 변화보다 한계엘리트, 대중, 외세에 의한 혁명적 또는 과격적 변혁으로 점철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수용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마련 등이 예이다.

9. 건전한 노동관을 확립해 정치나 관 우위의 입신양명을 지상과제로 삼는 삶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벼슬을 개인적 출세와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대장부의 지상목표로 삼아온 전통적 사고방식이 잔존하는 한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한국의 정치지상주의는 청산될 수 없다. 정치가 사회적 메타파워로서 이상 비대화될 때 사회적 자율성은 고갈되고 국가는 권위주의적이고도 수탈지향적이 되기 마련이다. 정경유착이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나 국가의 이러한 억압적, 약탈적 성향은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패비리 지나친 정부규제 등 권력형비리의 원인이 된다.

한국사회가 상호수탈적 비리사회로 전락한 이면에는 건전한 노동관이 결여된 탓도 크다. 현대의 서구 선진사회를 가능케 한 정신적 초석은 청교도정신의 검약, 절제정신의 생활화에 있다. 청교도정신은 성 베네딕트의 ‘육체노동의 신성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노동의 신성성과 검약 절제정신은 이후 근대 산업사회와 시민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노동천시 경향과 방종에 가까운 자기절제력의 상실에 젖어 있다. 향락산업의 번창과 노동기피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는 거품사회로 이끌어 환란 등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 부패비리, 불신, 좌절감의 근본원인은 노동을 혐오하고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회적 기풍에 있다. 땀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데서 그릇된 욕망이 싹트기 때문이다. 이런 욕망이 커갈 때 경쟁은 치열해지고 분수에 넘치는 욕망이 이기주의와 결합할 때 이중주의 기회주의가 판을 치게되는 것이다.

10. 물질만능주의를 치유할 신정신주의(new spiritualism), 탈물질적 가치(post-material value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양자는 지나친 산업화의 반성으로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영성회복운동이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의 지향점을 물질과 향락 위주에서 자아실현, 자기표현의 중시, 자유, 주체성과 내면의

---

47) 김병국, 앞의 논문(1996), 93 ~135 쪽



중시로 바꾸는 것이다. 사회적 범죄 비리가 현대인의 물질만능적 가치관과 이로부터 연유하는 삶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아회복과 내면적 성찰은 인간 삶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그것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국, 「갈등과 이념-한국정치의 잠재성과 한계」,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김병국, 「반(反)유교적 유교정치 한국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997 년 여름
- 김성곤, 「21세기 문화와 세계화의 과제」, 『계간사상』 2001 년 봄호
- 신정현 외, 『21세기 한국의 선택 국가체제와 정책과제』, 서울 우석 1998.
- 안병영,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계간사상』 2000 년 봄호
- 안택원, 「국가위기를 통해 본 한국병의 문화적 접근 한국문화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제언」, 『한국 정치의 개혁과 반개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정진홍, 「디지털문화의 전개: 센소러지와 감성융합」, 『계간사상』 2001 년 봄호
- 함인희,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2000 년 봄호
- 데리안, 「공간의 국제정치학: 시뮬레이션, 감시, 속도」, 홍성민 엮고 옮김, 『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학 새로운 국제정치학 이론을 찾아서』, 서울: 인간사랑 1991.
-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서울: 김영사, 1999.
- 앨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21세기 출발점에서의 생존전략』, 이규행 감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 자크 아탈리, 『21세기의 승자』, 유재천 역, 서울: 다섯수레 1993.
- A.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노명식 역, 『역사의 연구』 서울: 삼성출판사, 1985.
-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6.
- Banfield, Edward C.,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Glencoe, Ill.: Free Press, 1958.
- Coleman, James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 Ho, Favid Yau-Fai,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1976.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Inglehart, Ronald, "Korean Culture in Global Perspective: Phenomenology and Human Studies in in Korea,"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1995년 7월 10일)에서 발표된 논문
-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Inkeles, Alex and Daniel J. Robinson, "National Character: the study of modal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system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4, Reading M.A.: Addison-Wesley, 1954.
- Janicke, M., *State Failure: The Impotence of Politics in Industrial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0.
- Mathews, J. J.,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68, no. 2, 1989.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 R. and D. C. Shin, "Democratization Backwards: The Problem of Third-Wave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2001.
- Rosecrance, R.,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Politics-Surveys and Debates for Students of Politics*, vol. 17, no. 3, 1997.
- Rosenau, J. N., "The Relocation of Authority in Shrinking World," unpublished paper, 1990
- Virulio, Paul, *Pure War*, New York: Semiotext, 1983.
- Wilke, H., *Ironie des Staates*, Frankfurt, 1994.

주요어

IT시대, 국가발전 목표, 문화정향, 문화전략, 복합문화, 신뢰사회